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2019. 2. 18.

금 융 위 원 회
신용회복위원회



목 차



I.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II. 개선 방안	2
1. 연체 前~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	3
2. 연체 90일~상각 前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5
3. 상각 이후 : 감면을 산정체계 개선 및 감면을 상향	6
4.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 특별감면 도입	7
III. 기대 효과	9
IV. 향후 추진계획	10

I.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현황) 연체채무자의 채무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중

-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신복위), 채무자의 능력범위에서만 상환하고 잔여채무를 면책(→회생·파산)

☞ (참고 1)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현황

□ (개선 필요성) 그 동안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 ⇒ 신복위 제도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 채무조정제도 누적 지원자수 : 개인회생 104.1만명, 신복위 153.7만명

① 연체 前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려움*

* 연체 30일 이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

⇒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내 지원 필요

② 공적 채무조정에 비해 사적 채무조정의 채무경감 폭이 협소*

* 평균 채무감면율('17년)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29% VS 개인회생 61%

→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 단축('18.6월, 5년→3년)으로 감면율 추가확대 예상

⇒ 양 제도간 격차를 완화하여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채무자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채무조정의 감면혜택 확대 필요

* 개인회생은 감면율이 높은 대신 조정기간 중 궁핍생활 불가피 VS 신복위는 감면율이 낮고 장기간 상환하는 대신 생계비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장점을 보유

☞ (참고 2)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한 신복위 채무조정의 특징

③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존재

-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8년내 채무원금의 40%(최저 상환금액) 이상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함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제도 마련 필요

◇ '18.12.21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동안의 유관기관 등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

II. 개선방안

- ① (연체 前~연체 초기)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도입
- ② (연체 90일~채무상각)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제도 도입
- ③ (채무상각 後)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 ④ (상환불능 단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 도입

연체 前~ 연체 30일	연체 90일~ 상각	상각 後	상환불능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도입] - 연체발생 이전에 상환유예(6개월), 분할상환(10년) 등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감면	[원금감면율 확대] - 최대 원금감면율 60%→70% 상향 - 채무감면율 산정 체계 개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 일정기간 성실 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사전 신용상담체계 강화]

- (기존)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서 채무조정 내용만 신용상담보고서로 발급
⇒ (개선) 신용상담보고서를 신복위를 방문하는 모든 신용상담고객에 대해 발급
신복위, 개인회생, 서민금융상품 등 선택가능한 대안 비교 후 최적솔루션 안내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

1 연체 前~연체 30일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

※ 기존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단독채무자에 적용)과 상호 보완

가. 지원 대상

□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

-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③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
 - ③의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이력* 요건 추가

- * (i)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ii)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iii)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나. 지원 내용

채무자 분류	1단계	2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 채무조정 종결여부 결정 ① (상환능력 회복時) 채무 조정 종결 ②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 지속時)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 이행 ※ 고의적 연체 확인시 심사탈락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① 기본형 지원 :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

* 소득감소만 해소하면 정상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약정금리로 6개월 간 거치이자만 납부)
- 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속지원제도 실효

-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時 연체 90일(실효시 실효 후 3개월)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 단, 고의적 연체時*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제한

- * (예) ①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채무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큼에도 연체를 일으킨 경우

② 추가형 지원 :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

* 대출구조(예 : 만기일시상환, 超高DSR)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추가 허용

- 분할상환계획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리상한(예: 15%) 설정

-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③ 공통사항 : 연체정보 등록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

※ (예) 연체발생 4일 후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신청 → 신청시점 이후 연체일수 누적 제한 → 연체 30일 미도과하므로 단기연체정보 CB사 미통보

-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

다. 조치 필요사항

- ☐ (신복위 협약 개정) 채무조정의 종류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 ☐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등 개정) 채무자에게 연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 연체 前 사전경보 안내 및 연체발생 後 단기연체정보 등록 안내문

2 연체 90일~상각 前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가. 지원 내용

채무자 분류	현행	개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① 채무원금 미감면 ② 향후 이자 면제(=금리 0%) ③ 기존 연체이자 면제 ④ 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① 채무원금 0~30%* 감면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 차등 ② ~ ④ 현행과 동일

* 채권 상각 :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 허용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 (→감면방법은 상각채권에 대한 방식(6p)과 동일)

※ 단, 고의적 연체 방지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

☐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時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

<미상각채권 채무감면 적용 예시>

◇ 월소득 140만원(생계비제외 가용소득 40만원), 채무원금 5천만원(상각 3천만원, 미상각 2천만원)인 1인가구 채무자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행	개선
○ 상각채무 : 3,000→1,200만원(60% 감면) ○ 미상각채무 : 2,000만원(미감면) ⇒채무감면율 36%(5,000→3,200만원)	○ 상각채무 : 3,000→1,200만원(60% 감면) ○ 미상각채무 : 2,000→1,400만원(30% 감면) ⇒채무감면율 48%(5,000→2,600만원)

나. 조치 필요사항

☐ (신복위 협약 개정) 개인워크아웃時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허용

☐ (손비 인정 관련) 기재부와 협의 추진

3 상각 이후 : 채무감면을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을 상향

가. 지원 내용

채무자 분류	현행	개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상각)	① 채무원금 30~60% 감면 * 채무원금/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을 차등 ② 향후 이자 면제(=금리 0%) ③ 기존 연체이자 면제 ④ 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① 채무원금 20~70% 감면 * 채무원금, 가용소득 등 다양한 변수로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을 차등 ② ~ ④ 현행과 동일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時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최저 30%~최대 60%)에서 70%(최저 20%~최대 70%)로 상향

☐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채무감면을 산정체계 개선

❶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상각채무 20~70%, 미상각채무 0~30%) 산출

- 가용소득 산출시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하여 판단기준 정교화

❷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최대 +10%, 감면율 상한 70%)

* 감면율 가산요인 : 장기연체자(상환곤란 중대, 최대 +5%), 자영업자(소득 불안정성, 최대 +5%)

☞ (참고 3) 신복위 채무감면을 산정체계 개편안 상세 내용

나. 조치 필요사항

☐ (신복위 협약 개정) 개인워크아웃시 채무감면을 확대 근거 마련

4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 마련

가. 지원 대상

구분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소득·재산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¹⁾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¹⁾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¹⁾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0년 이상
채무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500만원 이하 ²⁾
지원내용 ³⁾	① 채무원금 90% 감면 ② (조정 전 채무원금 ≤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 최대 95% 감면효과)	① 채무원금 80% 감면, ② (조정 전 채무원금 ≤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 최대 90% 감면효과)	① 채무원금 70% 감면 ②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 (⇒ 최대 85% 감면효과)

1) 파산신청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60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기초수급자, 장애연금자, 고령자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 특례를 적용(단, 미상각채무는 30%만 감면)하나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에는 연체 10년 이상 채무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여 조정

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 (90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서울 : 3,700만원)] 이내인 자

② (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③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의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참고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

가구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60%	장애인연금	기준 중위소득
1	512,102	682,803	1,024,205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1,707,008
2	871,958	1,162,611	1,743,917		2,906,528
3	1,128,010	1,504,013	2,256,019		3,760,032
4	1,384,060	1,845,414	2,768,122		4,613,536
5	1,640,112	2,186,816	3,280,224		5,467,040

나. 지원 내용

- ①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 ①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 90% (종전과 동일)
 ② 고령자 : 80% (종전 70%) ③ 장기소액연체자 : 70% (종전 30~60%)

- ②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 필요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

<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 ◇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50만원인 (가용소득 4만원)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

구분	현행	개선
조정후 채무액	490만원	340만원
감면기준	상각채권 70%, 미상각채권 0%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실제 상환액	490만원(감면율 30%)	170만원(감면율 75%)
월상환금액×상환기간	51,000원×96개월	47,200원×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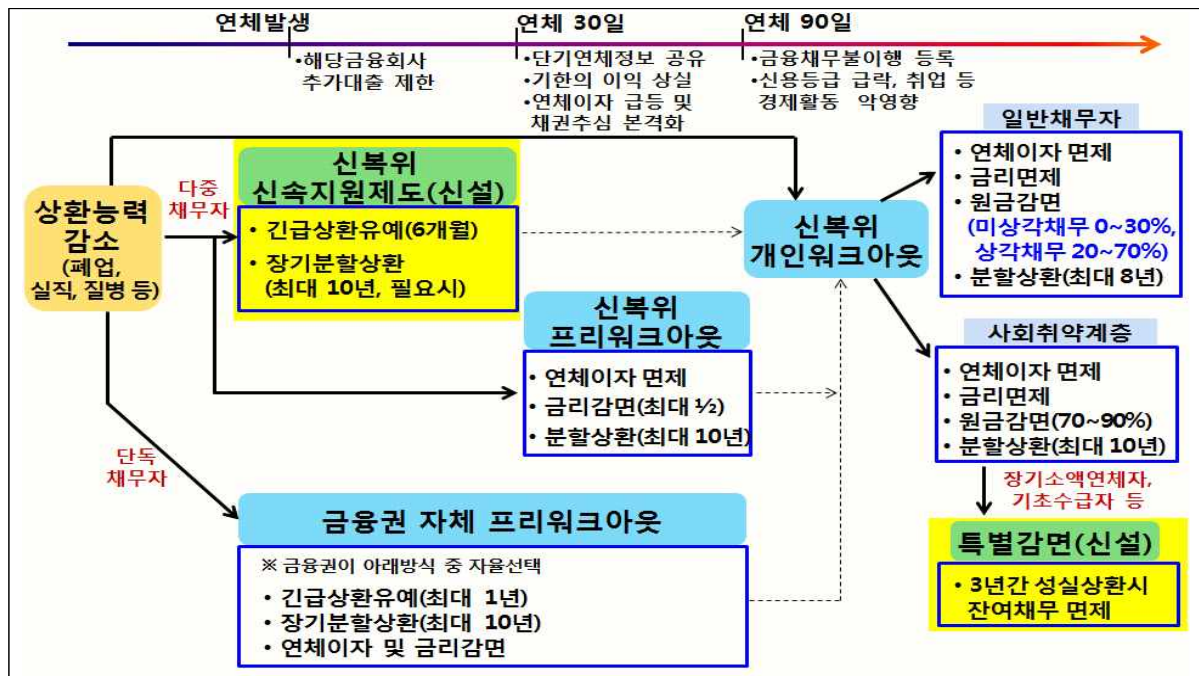
다. 조치 필요사항

- (신복위 협약 개정) 취약계층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근거 마련

Ⅲ.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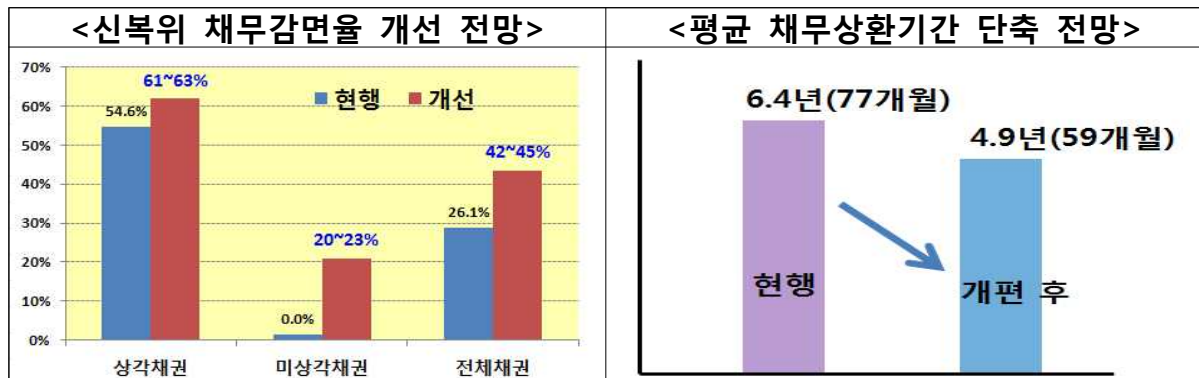
① 연체 前부터 상환불능 時까지 “촉촉한 채무조정체계” 완성

-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前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 완성
-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



② “채무감면을 확대” 및 “채무조정 성공률 상승”

-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
-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6.4년→5년 미만) 되고 실패율이 하락(28.7%→25% 미만)하여 재기지원 효과 확대



IV.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중 실행 완료
-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을 상향 및 감면을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올해 3~4월중)
-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손비인정은 기재부와 협의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 관
1.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19.8월	신복위
▪ 연체발생 前 신복위 채무조정 시행 근거마련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19.8월	금융위
▪ 단기연체정보 등록 안내시 신속지원제도 안내	대출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개정	'19.8월	금감원
▪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시 신속지원제도 안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개정	'19.8월	은행연 등 금융협회
2.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허용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손비인정 협의후 시행	신복위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금융회사에 손비 인정	기재부와 협의	손비인정 협의후 시행	금융위 기재부
3. 상각채무 감면을 상향 및 감면을 산정체계 개선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무 최대감면을 상향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19.3월	신복위
▪ 채무감면을 산정체계 개선	신복위 업무처리기준 개정	'19.3월	신복위
4.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19.6월	신복위

참고 1

국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현황

- 국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신복위 등 채권자 자율합의에 기초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
 - 외환위기 이후 개인대출의 급격한 팽창 및 대규모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신복위('02년) 제도와 개인회생('04년) 제도가 연이어 출범
 - 매년 약 20만명의 채무자가 신복위·법원 제도를 통해 구제

<연도별 공·사 채무조정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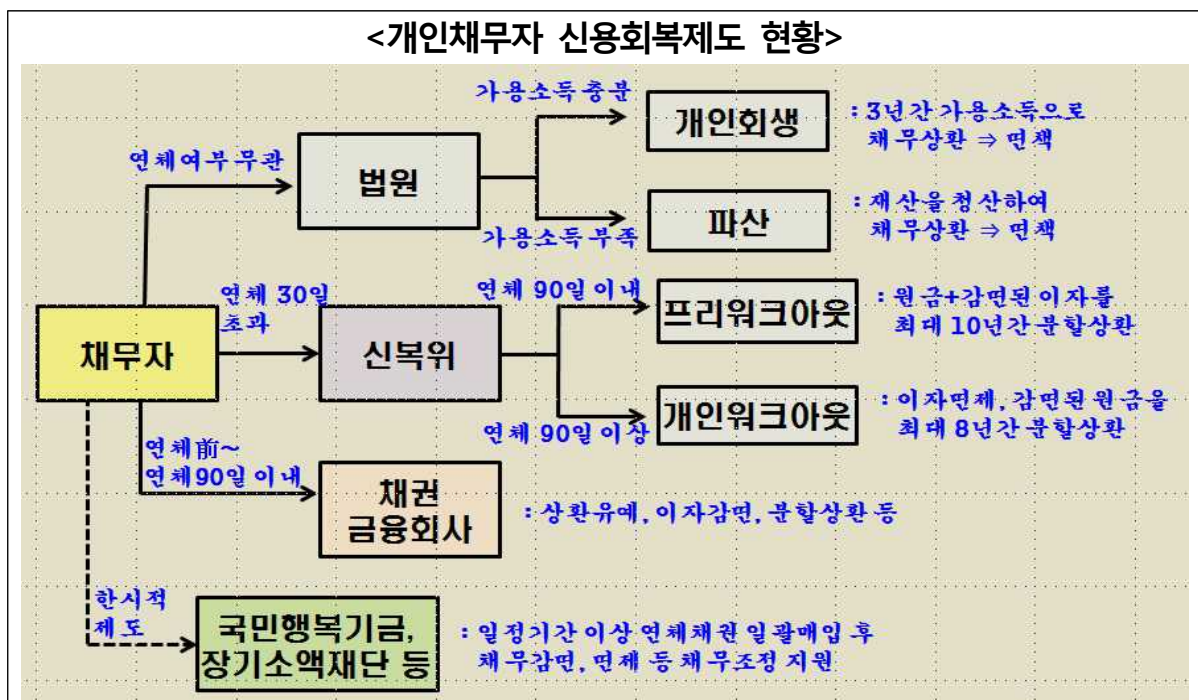
(단위 : 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복위	85,400	73,925	77,757	81,401	89,087	93,136
개인회생·파산	123,997	134,181	132,215	135,304	108,729	102,075
합 계	209,397	208,106	209,972	216,705	197,816	195,211

- 상시적 기구인 법원·신복위를 보완하여 국민행복기금 등 개인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하여 감면하는 한시적 지원기구* 운영

* 한미음금융('04년), 희망모아('05년), 국민행복기금('08년), 장기소액연체자재단('18년)

- 다자 간 협약인 신복위 제도와 별개로 개별금융사 차원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운영중

* 업권별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가계대출 119') 운영중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사전 감면하는 제도
 -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면 법원 직권으로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제도
- 신복위 제도는 채권자간 협약에 근거하여 법원제도보다 강제성은 다소 낮으나, 유연하고 신속한 구제에 유리
- ❶ (상환계획의 유연성) 개인회생에 비해 소득 중 채무상환에 쓰지 않을 수 있는 생계비 인정폭*이 큼
 - * (예) 최저생계비 외 교육비 추가인정, 무소득 성인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
 - 변제기간은 길더라도 변제기간 중 정상적인 생활 영위 가능
- ❷ (편리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등 절차적으로 단순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작성 등 절차가 까다로워 통상 법률대리인을 이용해야 해 많은 시간소요 및 절차비용 발생
- ❸ (빠른 신용회복) 상환 2년 이후에는 신용회복신청 이력의 공유가 제한되어 신속한 정상금융거래 가능
 - 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5년간(or 회생변제기간) 금융권에 공유
- ❹ (연대보증인 보호) 신복위 제도는 채무조정의 효과가 보증인에게도 적용돼 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
 - 개인회생은 주채무자의 채무만 면책되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원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그대로 지게 돼 보증인 부담이 지속

참고 3

신복위 채무감면을 산정체계 개편안 상세 내용

- ①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 지수에 따라 기본감면율(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 0~30%) 산출

- 기존 산식과 달리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환산

채무과중도 (기존)	=	$\frac{\text{채무원금}}{\text{가용소득}}$	=	$\frac{\text{채무조정대상 무담보채무원금 합계}}{(\text{월소득} - \text{생계비} - \text{제외채무 월상환액})}$
↓				
채무과중도(개편) = 채무원금(백만) - 36 × 가용소득 (= 월소득 + 재산환산액 - 생계비 - 제외채무 월상환액)				

채무과중도	상각채권 감면율	미상각채권 감면율
0 이하	20%	0%
1 ~ 36	$1.38 \times \text{채무과중도} + 20\%$	$0.83 \times \text{채무과중도}$
36 초과	70%	30%

- ② 기본감면율에 연체개월수(+)와 자영업자 변수(+)를 가산하여 적용감면율 산출 (가산치 상한 +10%)

- 연체개월수가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평균(36개월)을 넘는 채무자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추가감면 가산치 부여 (상한 5%)

연체개월수	가산 감면율
~ 36개월	0%
37 ~ 72개월	1.0%
73 ~ 119개월	3.0%
120개월 ~	5.0%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불안정성이 커서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추가감면율 적용 (상한 5%)

연체개월수	가산 감면율
일반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상)	2.5%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미만)	5.0%

참고 4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 지원실적

□ 신복위 개인(프리)워크아웃 지원 실적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계
신청	84,590	91,336	90,126	97,139	85,168	91,520	96,319	103,277	106,808	1,720,778
개인 워크아웃	77,308	76,839	71,795	77,481	69,679	76,098	79,231	83,998	83,713	1,562,206
프리 워크아웃	7,282	14,497	18,331	19,658	15,489	15,422	17,088	19,279	23,095	158,572
확정	72,329	79,172	80,368	85,400	73,925	77,757	81,401	89,087	93,136	1,536,572
개인 워크아웃	66,741	67,041	63,845	65,857	59,660	63,360	65,969	71,398	71,933	1,393,405
프리 워크아웃	5,588	12,131	16,523	19,543	14,265	14,397	15,432	17,689	21,203	143,167

□ 법원 개인회생·파산 이용자 수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계
개인 회생	신청	46,971	65,171	90,368	105,885	110,707	100,096	90,400	81,592	91,205	1,040,987
	인가	40,453	40,932	53,975	67,307	79,085	77,649	80,697	64,514	62,159	-
개인 파산	신청	84,764	69,755	61,546	56,983	55,467	53,866	50,288	44,246	43,397	1,066,335
	인용	75,811	73,554	68,265	56,690	55,096	54,566	54,607	44,215	39,916	-